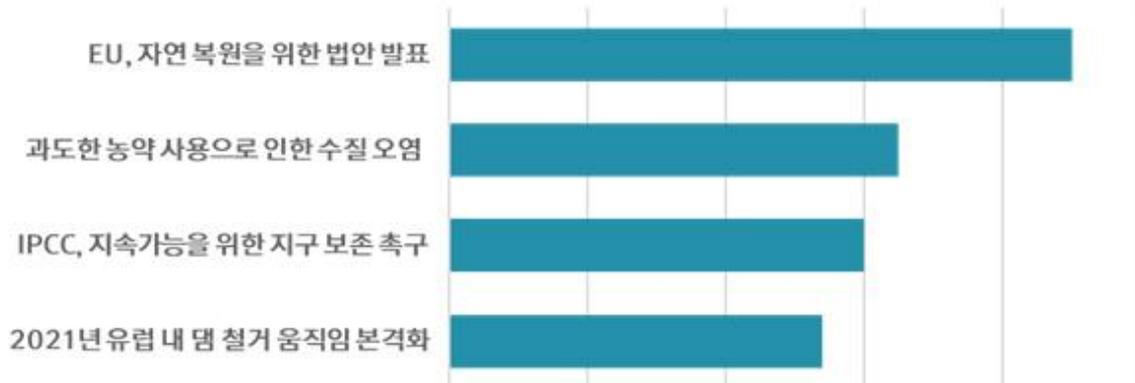


EU, 자연 복원을 위한 자연복원법 초안 발표

EU, 주요 이슈 (2022. 01 ~ 2022. 06) ※ 총 3,602건 키워드 분석 결과



- 6월 2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EU자연복원법(EU Nature Restoration Law) 초안을 공개함. EU 자연복원법 초안에 따르면, 유럽 내의 생물 서식지와 생물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반으로 줄이고 댐을 철거해 강을 복원하며, 육지와 바다의 20%를 복원하고 습지, 숲, 초원, 강과 호수, 사구 등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약 1,000억 유로 (약 146조 원)가 투입될 예정임
- 기존 EU의 정책들은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못한 상황임. 실제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야심차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하고 긴급하며 시간제한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 설정이 중요함. EU자연복원법 초안은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EU자연복원법 발효 2년 안에 여건과 필요에 따른 목표와 자금 조달 계획을 포함해 2050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관련 법안의 초안을 마련해야 함
- 2035년 EU자연복원법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검토 실시 예정임

EU, 자연 복원 법안 관련 주요 이슈

• 2022. 02. 28.

정책 입안자를 위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승인 요약본 주요 내용

B. 기후 변화가 현재와 미래에 미칠 영향과 리스크: 기후 변화 리스크는 기후 변화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기후 변화 적응 정도에 달림. C. 현재의 적응 수단과 그 장점: 기후 변화 관련 이니셔티브는 대부분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리스크를 줄이는데 집중함. IPCC 제5차 평가보고서(AR5) 이후 오적응의 증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자가 참여하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적응계획이 필요함. D. 기후탄력적 개발: 정부와 민간의 포괄적인 선택을 통해 가능함. 향후 10년 간의 선택이 중장기적 기후탄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ipcc.ch), 「Summary for Policymakers Headline Statements」, 2022-02-28

• 2022. 03. 18.

유럽의 숲 치유 법안: 자연 복원의 필요성

EC가 20년 만에 자연 관련법인 EU자연복원법 입법을 약속함. 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10만여 개의 보와 구조물이 존재하는 하천,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하는 유실된 이탄지 등의 생태계가 복원 대상임. 삼림협회들은 EU 산림의 29퍼센트에 해당하는 EU 생태보호구역(Natura 2000)만 새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EU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외에도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숲과, 특히 북부 냉대림 지역의 숲들도 열악한 상태임. 건강한 생태계는 삶의 토대이자 미래의 식량자원임.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강력한 자연복원법이 절실함.

자료: The Greens/EFA (greens-efa.eu), 「A Law To Heal Our Forests: Why We Need To Restore Nature Now」, 2022-03-18

• 2022. 06. 25.

살충제 줄이기와 댐 철거: 자연 복원을 위한 EU의 야심찬 법안

EC가 6월 22일 유럽의 자연 복원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법안 초안을 공개함. 2030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댐을 철거해 강을 복원하며, 육지와 바다의 20%를 복구하고 습지, 숲, 초원, 강과 호수, 사구 등 생물 다양성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내용. 약 1,000억 유로(약 146조 원)가 투입될 예정임. EU 회원국들은 2년 이내에 국가 차원의 복구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를 앞두고 글로벌 기준 마련이 기대됨

자료: Down To Earth (downtoearth.org.in), 「Halving pesticide use, dismantling dams: EU's ambitious draft law to restore nature」, 2022-06-25

이슈 세부 정보

EU자연복원법 초안 세부 사항

EU자연복원법 초안(요약)

구분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생물 서식지와 생물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회복 - EU 종다양성 전략 2030의 주요 목표인 생물종 다양성 회복을 궤도에 안착 - 2030년까지 EU 영토의 최소 20%, 205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지역에 기반한 복원 조치를 즉시 시행(제1조) - EU 회원국은 2040년까지 도시 녹지 면적을 3%, 2050년까지 5% 확대하고 도시지역에서 최소한의 나무 덮개 확보(제6조) - 회원국들은 하천 장벽과 댐을 철거해 2030년까지 최소 25,500km의 자유 유량 하천을 복원(제7조)
강화된 구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EU의 정책과 노력으로는 생물종 상실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으로 2020년까지 파괴된 생태계의 15%를 회복하겠다는 자발적 목표 달성하지 못함 -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야심차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하고 긴급하며 시간제한이 있는 목표 설정이 중요 - 생태계 회복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대 목표와 EU자연복원법을 강화하고 이를 뛰어 넘는 생태계 고유 목표 제시 - 2050년을 목표로 하며 2030년과 2040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가짐
자연복원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생태계는 사회적 웰빙과 번영의 토대 - 자연 복원은 기후변화, 식량안보, 정신건강 등 당면 문제 해결에 필수 -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사회적 이익을 촉진하고 경제 부문의 유연성을 높이며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 창출 - 공동 이익을 통해 당면한 기타 목표 및 EU그린딜 등 국제적 약속 준수에 용이함
강력한 실천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원의 계획, 자금 조달, 실천 및 모니터링을 위해 전략적 우선 순위 결정 및 기획이 필요함 - 회원국들은 EU자연복원법 발효 후 2년 안에 2050년까지의 여건과 필요에 따른 목표와 자금 조달 계획을 포함하는 국가자연복원계획을 제출 - EC는 각국이 제출한 계획들의 요건 충족 여부 평가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원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기대했던 생물다양성 복원의 혜택이 산출되고 있는지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보고가 필요 - 목표 달성 정도는 회원국들이 모니터링해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EU 전체 보고서 작성. 2035년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검토 실시 -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지식을 확장하고 EU생태계와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중대 기회를 제공

자료 : Institute for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ieep.eu), 「The proposed EU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The path to nature's recovery」,2022-06-22
 FINAL IEEF (ieep.eu), 「The proposed EU Nature Restoration Regulation: The path to nature's recovery」,2022-06-22.

참고 문헌

□ 참고 사이트

1. The Greens/EFA (greens-efa.eu),
2.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ipcc.ch)
3. Down To Earth (downtoearth.org.in)
4. Institute for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ieep.eu)